

# 백래시 한국사회 2021년 8월 26일(목) 1시-3시

##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 ■ 개회식

- 주제 발표 [발제1] 남성연대부터 신남성연대까지: 프레임과 전략 변화 양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
- [발제2] 백래시 정치에 성평등을 고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
- [발제3] 페미니스트, 교차하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토론 [토론] 여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F.N 권예원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신아 활동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 질의응답 및 폐회식

\*본 토론회는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공동주최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온라인 국회 토론회

[일정]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온라인 줌(ZOOM) 회의실

[발제]

- 남성연대부터 신남성연대까지 : 프레임과 전략 변화 양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
- 백래시 정치에 성평등을 고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소정)
- 페미니스트, 교차하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황연주)

[토론]

- 여자대학교페미니스트네트워크 W.F.N. 활동가 권예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아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발제 I 남성연대부터 신남성연대까지 : 프레임과 전략 변화 양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

### 들어가며

우리는 2021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집게손가락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을 성평등을 향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백래시라 명명한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던 이 ‘논란’들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백래시와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또 새로이 짙게 되는 지점이 있다. 해당 발제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여성혐오의 양상과 백래시 방식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페미니즘 운동의 다음 전략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 1. 과거의 여성혐오와 백래시의 양상

#### - ‘무개념녀’ 낙인의 여성혐오

2000년대 들어 여성을 낙인하는 방식의 여성혐오가 문화처럼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된장녀’, ‘김치녀’가 있다. 이것의 실체는 데이트 비용에 돈 안 쓰고 명품백 사는 사치스러운 여자, 밥값보다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여자였고, 검소하고 허영심 없이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감수하는 여자가 아니면 곧장 ‘된장녀’, ‘김치녀’가 되었다. 이후 ‘맘충’, ‘김여사’도 같은 맥락으로 욕먹어 마땅한 여성을 구분하며 여성들이 ‘개념녀’가 되기를 강요하는 인식이 심화되었다. 양육은 오롯이 여성의 책임이며 운전은 여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을 근거로 여성을 비하하는 낙인이었다.

이러한 낙인은 ‘개념녀’와 ‘무개념녀’를 구분해 ‘개념녀’에서 탈락되면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으로 만들었고, 여성이 동등한 시민의 자격을 갖기 위해선 철저히 ‘개념녀’를 수행해야했다. ‘개념녀’를 수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방식은 여성이 남성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감히 주체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곧 낙인의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효과적으로 여성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여성이 결혼 후 가사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것을 ‘놓고 먹는다’고 조롱하며 취업과 시집의 합성어인 ‘취집’이란 말을 만들었고,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남성 경제력에 기생하는 존재로 여겼다. 또한, 보지달린 것이 벼슬이라는 의미의 ‘보슬아치’는 성행위를 허락하지 않을 때, 여성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등에 사용되었고, 여성의 주체성을 묵살하며 조롱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성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도구, 대상, 타자로 여기는 전형적인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무개념녀’를 단죄했던 것이다.

#### - 남성연대로 결집된 백래시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며 성재기가 반페미니즘 단체 남성연대를 창립했다. 성재기는 억울한 남성들의 정서를 등에 업고 역차별을 주장했고 ‘된장녀’, ‘김치녀’ 논리를 적극 이용해 남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성평등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 또한 토론회, 간담회, 인터뷰, 방송활동 등 공식 석상에 호명되며 여가부 폐지,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아청법 반대,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고 이는 공적 발언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선 트위터를 중심으로 성재기의 여성혐오적 발언들이 남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때의 남성연대는 단단히 결집되었다기 보다는 성재기 개인의 활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있다.

## 2. 페미니즘 리부트 ‘메갈리아’의 등장과 온라인 여성운동

격렬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을 백래시라고 할 때 지금의 백래시를 말하기에 앞서 그동안 전개된 놀라운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을 먼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가 일상다반사가 되면서 끓어오르던 여성들의 분노는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했다. 한국인 격리 대상자 여성 두 명이 격리 요구를 거절했다는 오보로 인해 여성혐오적인 게시물이 쏟아지자, 분노를 표출하며 ‘디씨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게시판에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독립 사이트 ‘메갈리아’가 열렸다. ‘메갈리아’의 운동적 성과는 눈부셨다. 100만 명의 유저가 이용하던 대규모 성폭력·성착취 사이트 ‘소라넷’을 고발해 폐쇄운동을 벌였고 끝내 ‘소라넷’은 폐쇄되었다. 언제나 일어나기에 지나칠 수 있었던 여성 살인 사건을 공론화하여 강남역에 추모의 물결을 일으키고,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메갈리아’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미러링’ 전략으로 남성문화의 치부를 드러내 가시화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페미니즘 리부트의 물결은 2018년 불법촬영 사건 편파수사 규탄 집회로 이어져 여성 단일의제로 6차에 걸쳐 누적 추산 35만 명이 거리에 나오는 역사를 만들었다.

## 3. 최신의 여성혐오와 백래시의 동향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나는 최신의 여성혐오 방식 : 여성능욕

강렬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남성문화와 여성혐오는 과거와 결이 다른 양상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한다.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착취 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지원하면서 목격한 실태들은 여성을 ‘김치녀’나 ‘된장녀’로 분류하지 않고 그저 능욕과 능멸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여성에게 얼마든지 가학적이고 잔인한 착취를 저지할 수 있는 소위 ‘노예’로 취급하는 문화가 놀이처럼 그 공간에 향유되었다. 온라인 공간, 즉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태가 더욱 집단적으로, 거리낌 없이 벌어질 수 있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이었던 ‘박사’ 조주빈을 칭송하며, 여성을 처참하게 망가트리려고 하는 욕망 아래 피해 양태는 심각했다. 여성연예인들의 얼굴표정을 기괴하게 편집하고, 특히 일본에서 성적으로 흥분한 여성의 표정을 여성혐오적으로 표현하는 ‘아헤가오’같은 것으로 편집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사진들을 텔레그램 이모티콘 스티커로 만들어 대화 도중 아무 맥락 없이 사용했다. 여성을 하찮게 여기며 짓밟고 능욕하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의 지배적인 문화이다.

‘지인능욕’이라는 디지털성폭력 가해 양태가 있다. 말 그대로 지인을 능욕한다는 의미로 아는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합성·편집·가공하여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을 동반해 유포하는 방식이다. 몇 년 전까지 ‘지인능욕’은 곧 합성피해를 의미했다. 그러나 합성은 지인을 능욕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굳이 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능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셀카 사진에 사정하거나 정액을 묻히기도 하고, 합성하는 수고를 앎더라

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만으로 이 여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허위사실을 유포만 해도 ‘능욕’은 성립된다. 이는 단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는 여성, 여성 연예인, 때로는 그저 SNS 너머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가리지 않고 능욕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것이 다수 일어나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지인 능욕이 어느 소수 남성의 기괴한 짓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여성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함을 증명한다. 여성을 망가트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재밋거리가 되는 실태가 최신의 여성혐오 방식이다.

- 최신의 결집된 백래시 : 신남성연대

디지털성폭력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의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2, 30대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된다며 강한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자신들은 무결한 시민이고 그동안 가부장제 아래 가족을 먹여 살리고 희생해온 것은 남성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상위시대이며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이므로 현재의 차별받는 피해자는 바로 남성이라는 인식이 2,30대 남성 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족을 혼자 먹여 살리는 가부장 신화는 학습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역사는 지워졌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생활화되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고용불안, 병역문제 등이 이대남이라 불리는 세대의 억울한 정서를 더 자극했다. 이 정서를 기반으로 결집해 과거 성재기가 대표로 있던 남성연대에 이어 백래시의 새로운 세대 격인 ‘신남성연대’가 조직화되었다.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로 그동안 불평등을 지적하던 언어들이 성평등을 향한 공격으로 사용되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한다는 말이 마치 혐오의 언어도 정당한 발화로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처럼 왜곡되고, 메갈들의 ‘미러링’도 다시 ‘미러링’하는 등 싸울 주체를 페미니스트 여성으로 상정하고 페미니즘 격퇴를 외치며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윤지선 교수에 대한 공격과 메갈 집게손가락 논란, 최근 올림픽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이 있다.

과거 낙인의 방식으로 “너 메갈이지?”라고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단죄하려했던 행위들이 공격 발화로 접수되어 기업이 사과하고 정부 부처가 민원으로 수용해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스트는 곧 ‘남성혐오자’라는 논리로 페미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를 강요하며 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프레임화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혐오세력의 공격이 마치 정당한 요구나 권리처럼 인정됨으로써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회적으로 동등한 의견처럼 수용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혐오세력의 ‘승리 경험’으로 축적되며 점점 기세가 오르고 실제 피해상당 현장으로까지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본 단체에 신남성연대에 의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던 신남성연대에게 현장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신남성연대 대표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그대로 촬영되어 유튜브에 게시되었고 피해자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집회 때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란 무엇인가? 집회와 시위는 누구의 권리인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의 목적을 가진 집회시위란 것이 어떻게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최근 심각해진 이 백래시에 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모여 ‘해일’이라는 연대체를 조직했고 전국에서 집회시위를 열었다. 신남성연대는 해일의 집회 현장에 ‘조커’분장을 하고 출몰해 집회를 방해하고 공격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누구를 보호했어야 하는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신남성연대의 공격을 똑같이 ‘집회방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 4. 우리의 다음 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최신의 백래시는 그동안의 사회운동 방식을 베껴내 소위 ‘남성인권운동’이란 의제로 전략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만들고 특히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슈파이팅하듯 집단행동을 기획하며 더 많은 남성들에게 연대를 요구한다. 이들은 과거 성재기의 남성연대보다 결집력 있고 온라인 공간에 능숙하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혐오가 세력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처럼 보여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 노골적으로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폭력과 착취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놀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신남성연대를 비롯한 백래시를 개개인이 각자 견뎌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함께 이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대신 서로를 돌보며 한발 더 전진하기 위해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우리의 다음 운동 전략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많은 동료들과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 풍성한 논의와 고민을 이어가길 바란다.

##### - ‘정의’로의 지향

‘평등’이라는 가치가 최근 ‘공정’ 논리와 함께 오히려 납작하게 읽히고 있다. 누구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분배될 권리를 주장할 때 서로의 몫을 누가 더 많이 빼앗는지 따지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의 본질적인 가치는 ‘정의’에 있다. 구조적인 차별의 실태를 이해하고 소수자가 놓여진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논리가 무조건 ‘너와 내가 똑같아야’하므로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파이싸움에서 몫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지금 투쟁해야할 대상은 정의로 가는 세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너’와 ‘나’의 싸움에서 ‘우리’와 ‘부정의’의 싸움으로 전환이 중요하다.

##### - 대등한 싸움이 아닌 압도의 방식으로

메갈의 성과는 앞으로도 여성운동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메갈의 전략’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왔다. 메갈의 전략들이 백래시 세력에게 반격의 언어로 사용될 때 우리의 다음 전략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압도할 수 있는 공적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러링’은 통쾌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이지만, 폭력과 혐오의 재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부정의와 맞서는 우리의 언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와 결코 대등할 수 없다. 백래시는 전 세계 여성운동 현장에 언제나 존재했고 페미니즘 운동이 대단해질수록 반격도 거세져왔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들, 역사적 근거, 학술적 토대 등 페미니즘이 가진 자원들은 반격을 압도할 힘이 있다. 백래시에 대항하는 주체를 정의를 지향하는 연대자들과 더 많이 연결하고 압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다양성’ 포용과 자생력 강화

홀로 백래시를 직면할 때와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대응할 때의 위기감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이 사그라든 원인을 몇몇 학자들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또 다른 소수자를 향해 이어지기도 하므로 백래시는 페미니스트들만의 문제라

고 볼 수는 없다. 정의로 나아가는 연대의 장을 지향하며 모든 소수자의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까지 연대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지 않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 함께 싸울 동료로 맞이해야 한다.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진영 안에 갇히지 않고 활발히 토론하며 여성주의의 확장을 꿈꾸는 자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온·오프라인의 연대의 장을 만들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작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엠브렐라 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내부 혁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다시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기능을 살려내고, 진영으로 갈라진 페미니즘 운동 지형을 종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성평등한 정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여성운동, 확장을 통한 결집은 우리의 자생력이 될 것이다. 메갈들이 일으킨 페미니즘 리부트 물결이 계속 파도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 나가며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때 ‘어떻게’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이기에 또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발족선언문에 밝혔듯 이 부조리의 시대를 무기력한 냉담으로 통과하지 않기 위해, 모순의 시대일지언정 모두가 함께 용기와 저항으로 통과하기 위해 발을 내딛고자 한다.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이름 붙일 때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더 큰 분란을 일으키며 차별과 폭력의 구조에 균열을 낼 것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의 놀라운 성과들은 지금의 반격을 헤쳐나갈 용기가 된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승리는 성평등 사회의 세계, 정의의 세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발제 I 백래시 정치에 성평등을 고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소정)

### 3일의 보도,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

2021년 8월 23일, “꿈 많던 26세 제 친구는 2021년 8월 17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다른 사람에게 교제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언쟁하다 무차별 폭력을 당했고, 병원에 실려 온 지 3주 만에 숨을 거뒀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토록 원한 대기업 취직에 성공해 첫 월급을 받은 다음날 발생한 사건으로 친구는 죽은 반면,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버젓이 일상을 살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26세 한 꿈 많던 여성의 친구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신상 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2021년 8월 24일, 육군에 복무하는 여성 부사관 한 명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자살을 시도 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공군 그리고 해군에서 성폭력 사건 이후 부적절한 조치와 2차 가해, 군 지휘체계에 종속된 군사사법체계 속에서 연이은 죽음을 마주한 뒤 육군에서도 또 같은 이유로 잃을 뻔했던 한 부사관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같은 날,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빠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다음날,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은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사퇴 했다. 지난 5월 공군 이중사의 죽음 뒤 죽음을 일으키는 군을 개혁하고자 만든 위원회였다.

2021년 8월 25일, 성남의 한 인사과 공무원이 2019년 작성되었다는 성남시청 근무 30대 미혼 여성 직원 리스트 문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명단의 중간 전달자는 원정 골프 접대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되었다는 이였다고 함께 보도되었다.

대한민국 사회 여성에게 있어 ‘죽을 것 같다’는 것은 그저 힘들다는 말을 과장한 표현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이다. ‘불안하다’는 건 실재하는 위협의 결과다. 그리고 그 현실을 찾기 위해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뉴스로 보도되는 현실로 여성의 죽음과 위험한 일상을 마주한다. 더불어 폭력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데 참여해야할 국가기관이 바로 성폭력의 온상인 사실도 확인한다. 단 3일 동안 보도된 뉴스만으로도.

### 페미니즘 리부트와 문재인 정부

2016년 5월, 한 여성의 죽음이 다른 여성들의 죽지 않기 위한 연대를 이끌어 낸 것은, 감각적으로 ‘강남역의 한 여성 시민은 여성이어서 죽었고, 여성인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을 끊기 위해 여성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조직된 목소리를 내었다.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주의 운동의 사회정치적 힘은 초기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



죄, 낙태죄 폐지 문제로 수렴되었다. 2016년 말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이게 나라냐’고 고함치며 각자가 살고 싶은 일상과 사회를 이야기하던 운동이 분출되던 시기, 여성의 안전한 일상, 여성이 여성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은 한국사회 역동적인 사회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2017년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것이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유권자에 호소하는 수식어가 된다는 판단을 하게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함께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19년 7월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은 청원 98개 중 39개(39.8%)가 젠더 이슈 관련 청원이었다.<sup>1)</sup>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2016.04	2018.02	2018.11	2019.02	2019.09	2019.11	2020.01
소라넷 폐쇄	양진호 등 웹하드, 필터링업체 음란물 유통방조혐의로 고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성폭력 대응 현안보고 <a href="#">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안</a> 국회 본회의 통과	N번방 사건 시작, 정준영, 최종훈 사건 보도	추적단 불꽃, N번방 최초 보도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N번방 관련 국민청원 10만명으로 마무리

- 낙태죄 폐지

2016.10	2017.02	2017.11	2019.04	2020.10	2020.10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낙태죄 헌법소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출범	현재, 낙태죄 위헌판결	정부, 낙태죄 존치하는 법 개정안 발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공동행동]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후보시절부터 페미니스트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명하며 임기 초 내각 구성 과정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여성을 주요요직에 중용했다. 이런 행보는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의 공약은 물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약속을 지킬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20대 여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은 높았다.

성평등한 사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집권 초기, 2018년 1월 안태근 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같은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발로 이어진 미투 운동은 문화 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각계에서 점화되어 확산되어갔다. 그리고 2018년 6월,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고, 같은 해 말 버닝썬 문제가 드러나면서 연예계 성매매, 성접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촛불개혁에 준한 사회변화를 이뤄낼 거라는 기대가 유효한 상황에서 2018년 6월, 페미니스트

1) 페미니즘이 ‘이남자’ 지지 이탈 원인이라는 ‘손쉬운’ 분석 너무(한겨레, 2021.04.17.)

들의 사회변화에의 요구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공존했다. 집권 초기 94%까지 달했던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그 낙폭이 높지 않았다. 낙폭이 높아진 건 2019년 9월 조국 사태 때와 2020년 7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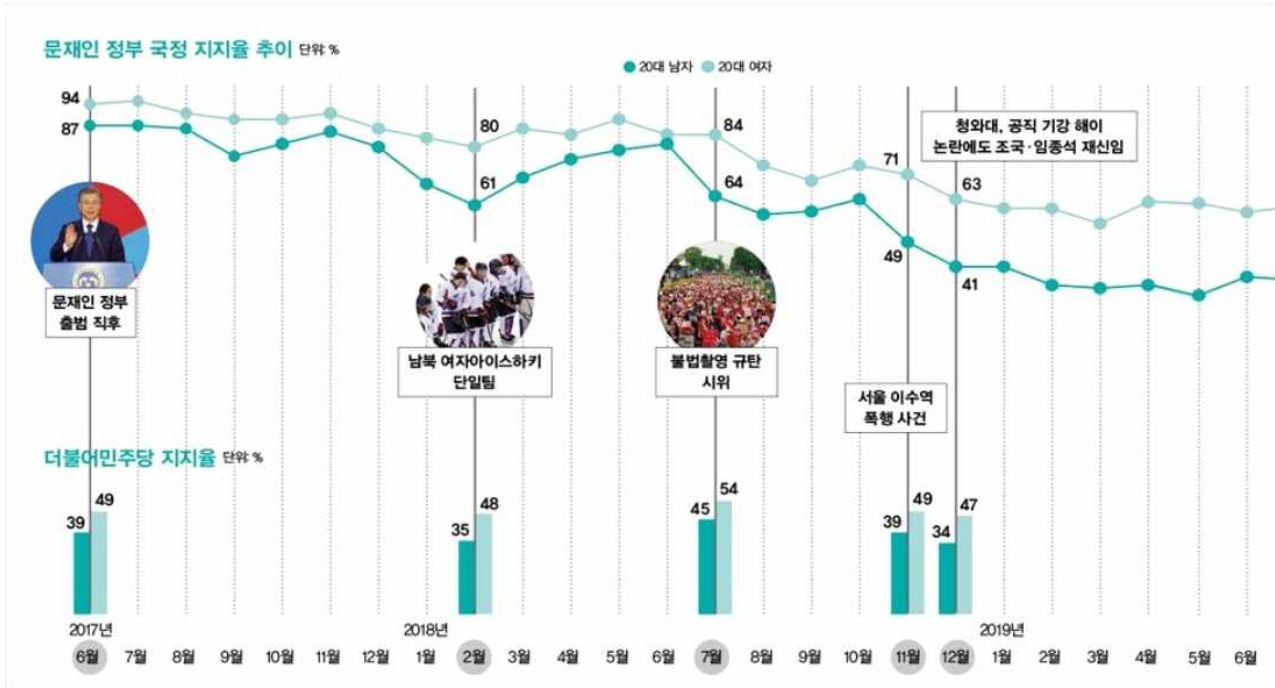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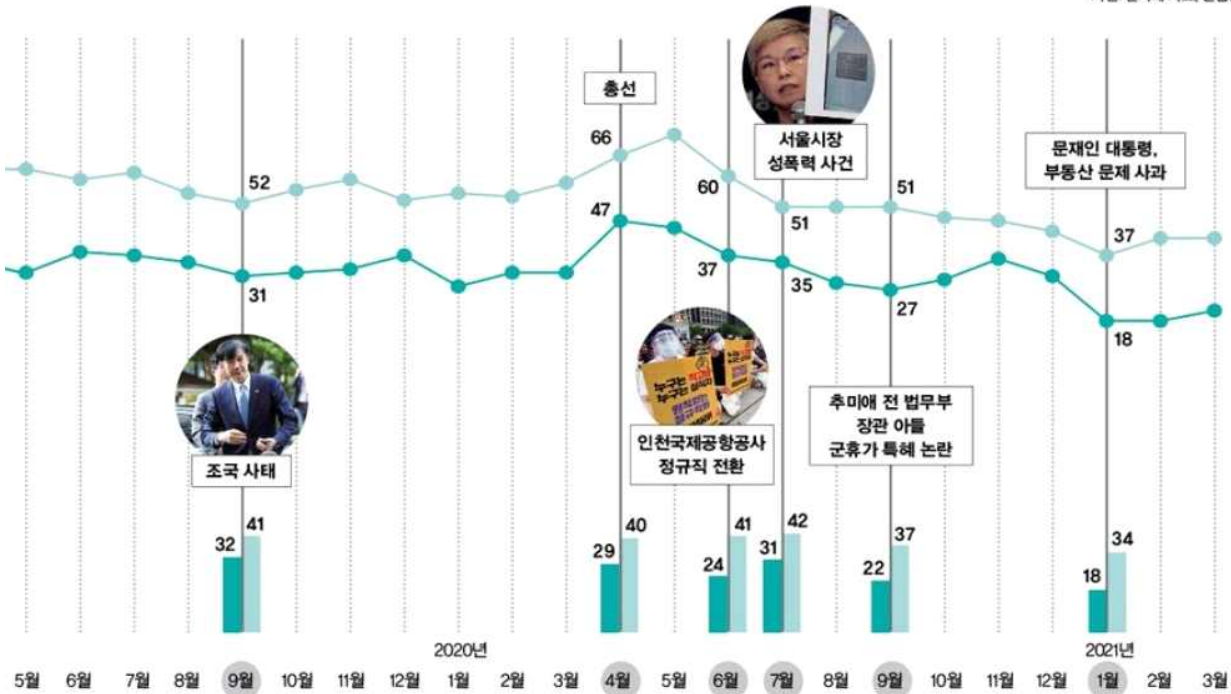


사진: 한겨레 자료,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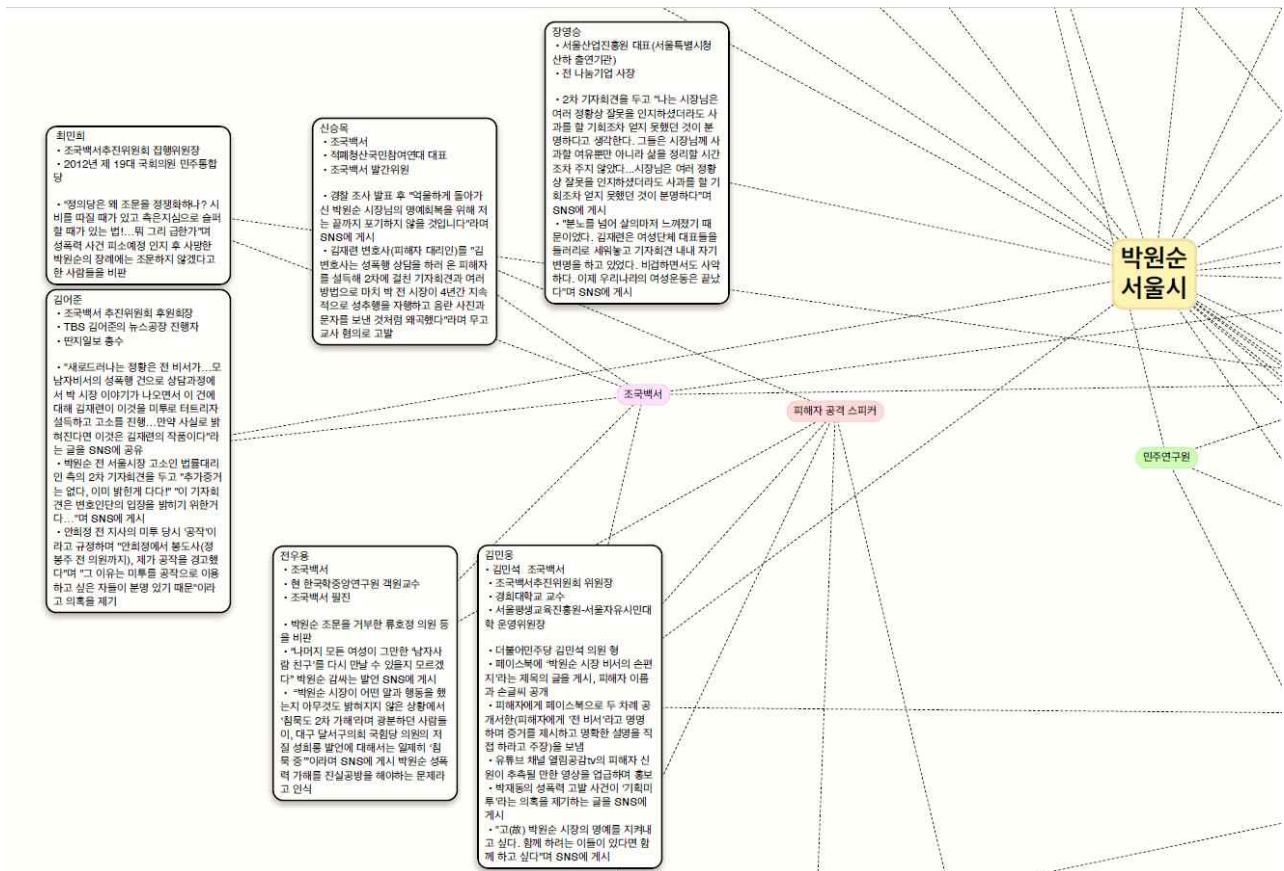
그림출처. 페미니즘이 '이남자' 지지 이탈 원인이라는 '손쉬운' 분석 너머(한겨레, 2021.04.17.)

흥미로운 사실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 조국 수호를 촛불개혁과

정권 수호에 일치시켰던 세력과 2021년 4월 재보선을 만든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무고함을 설파하며 피해자를 공격한 세력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인 모습은 '정치진영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원칙과 성평등 가치 모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데 있다.

###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연대하는 입장을 내며 정치진영의 논리로 피해자에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좇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 맵'을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맵핑 결과,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와 무고함을 옹호하고 앞장서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조국 전 장관 수호'를 위한 역할에 한 자리씩 맡았던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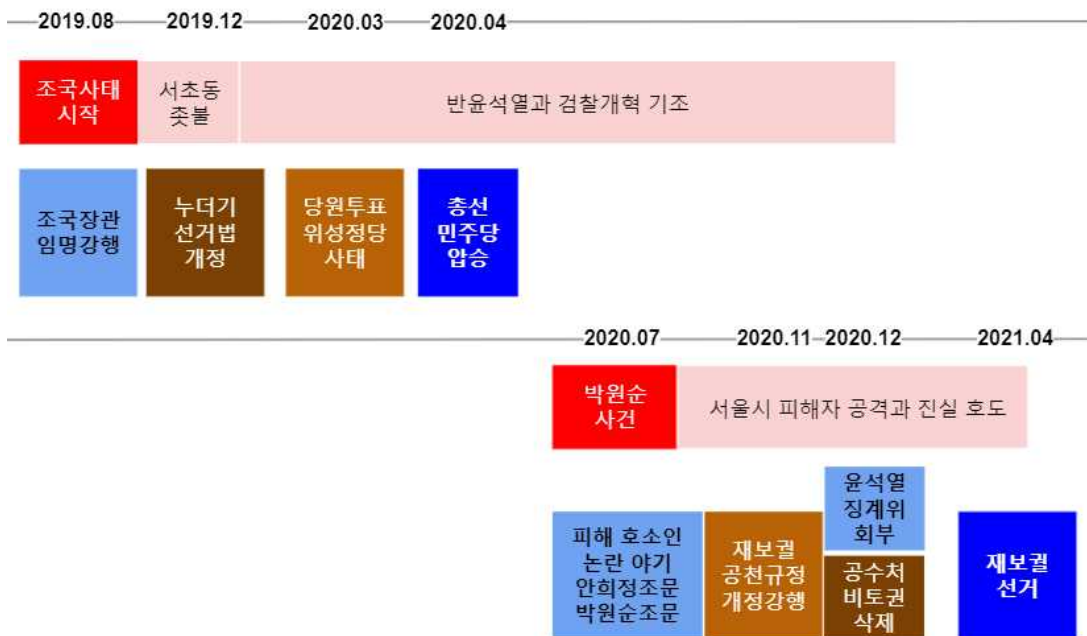


그림출처. 박원순성폭력카르텔맵 일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작성

2020년 12월 1심 판결에서, 그리고 2021년 8월 2심 판결해서 재차 확인 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행위는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의 결과이자 억울한 누명인 것처럼 호도되었고, 친여권 인사들의 여론 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에 이어 국회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겨우 수용하고는 그마저 반헌법적 위성정당으로 무력화시켜 2020년 4월 총선에서 슈퍼여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

행위를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장지로 활용했다.

2020년 7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에는 대통령부터 내로라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 조문 행렬에 나섰고,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민주당 인사들은 박원순에 대한 애도와 밝혀질 때까지는 모를 일이라는 등의 이야기로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대놓고 하지 못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부정과 공격은 조국 수호 여론을 조성했던 이들에게 맡겨졌으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재보궐 공천규정 개정을 강행하고 역시, 그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의 결과를 명분처럼 활용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방법이 성공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의 자리를 주고, 2018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권한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주었던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 주도권도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주었다. 더 밀어줄 수 없을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던 선거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패권처럼 휘두르며 자기 정치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를 막지 못했다. 2020년 4월 오거돈 부산시장과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이 그 결과였다. 자당 주요 정치인들의 위력 성폭력 사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한 건 '성평등 실현 과제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기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선거일정에서의 이해관계' 뿐이었다. '정치진영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결과, 민주당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집단으로 부정하는 거대 가해 카르텔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에 힘을 약화시키는 소리이니, 피해자를 공격하는 스피커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 편일 수밖에 없었다. 거대 권력의 백을

둔 친여권 인사들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공격하는 한편,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피해자를 공격했다. 적폐청산국민연대 신승목 대표(조국백서 발간위원), 경희대 김민웅 교수(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우용 씨(조국백서 필진) 등이 대표적이다. 김어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김용민 TV의 김용민 PD 등 언론의 영향력을 가진 친 여권 인사들은 물론 여기에 서울시 6층사람들이라 불리는 박원순의 사람들과, 열린공감 TV등 2020년 총선을 겪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친여권 유튜브 채널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여론 형성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당초 표방한 사회변화의 과제와 원칙이 자신들의 집권 명분이기에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는 척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 과제와 원칙을 저버리는 데 사용되었다. 성평등 실현 또한 그랬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버리지 못하는 대신 성평등 원칙과 피해자의 인권을 버렸다. 고발시기부터 피해호소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그러했고, 박원순 전 시장의 조문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 불멘 소리를 보냈던 민주당 인사들이 그러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사과한다’로 통치며 당헌개정과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했던 이낙연 대표가 그러했으며, ‘피해호소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들을 캠프에 기용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일조했던 언론인, 스피커들과 함께 ‘서울을 구하자’는 기획으로 머리를 맞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그러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력 성폭력에 ‘미투’라고 용기내어 고발한 피해자를 향해 기획 미투라 음해하고, 2차 가해하는 친여권 성향 스피커들의 목소리에 동조했으며 수수방관했다. 2020년,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고발되었던 가해자부터 옹호했고, 여전히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들은 사회정치적 지위와 권력망에서 이탈되지 않았음을 과시하고 시전하는 데 일조했다.

미투운동 외에도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변화에의 요구가 수렴되었던 디지털성범죄와 불법촬영, 낙태죄, 연예계-권력 유착 성접대 등의 문제에서도 분명 앞으로 나아간 것도 있었으나, 많은 부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권력에 의해 변화를 거부하려는 반동에 직면했다. 2019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다시 조명된 장자연 사건으로 한국에 왔던 증언자 윤지오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낸 후원금 문제로 되려 적색수배의 대상자까지 몰아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1년 반 동안 묵묵부답이던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존치 의견을 내며 정권 초기의 응답에 기대했던바와 정반대의 행정적 의지를 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손 놓고 보고 있었던 것이 그 실례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나아가기 전, 이미 집권 행정부와 여당에 의한 여성주의 운동이 열망하는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로서의 백래시는 물결 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평등 이슈에 국한하지 않았다. 부동산, 일자리, 노동인권 등 일상의 시급한 영역에서 민주당은 기만적인 태도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기를 미루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적당히 평풍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웠다. 그 결과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패했다.

#### 4.7 재보궐 선거, 잘못된 승패 분석과 백래시

집권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사회·정치적 변화의 과제를 수행하라고 권력을 쥐어줬더니 그걸 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과 나태함에 있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지,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요구에 응한 적극적인 표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위원이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제1야당이 성공요인을 이대남에게 돌리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기반을 다지니, 그걸 보던 더불어민주당은 손쉽게 자신들의 패인을 페미니스트들에게 돌리는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의 대표는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공정론을 들이대며 페미니즘을 공격하고, 손가락 모양을 두고 남성혐오자들의 기획이라는 주장에 정치적 힘을 실었다. 언론은 주장을 그대로 베껴쓰며 페미니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실행하는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과 그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준석의 말로 주요 여론을 형성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왜곡된 공정론과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이 과다 대표된 여론 속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등의 입장과 발언으로 갈피를 못 잡고 눈치 보며 동조했다.

‘손가락 모양’과 ‘남성혐오’를 연결 짓고, ‘불공정’과 ‘페미니즘’을 등치시키는 프레임을 제1야당이 조장하고 집권여당이 묵인한 결과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전방위적 공격’의 상태로 나아갔다. 그 결과 젠더폭력의 문제와 이를 바꾸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손가락’과 ‘숫컷’ 목소리에 묻혔으며, 여전히 여성들은 구조적 차별 속에 폭력을 당하고 죽어간다.

#### ‘성평등’이 시대적 과제임을 자각하는 정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

2022년 3월 대선, 2022년 6월 지선. 다시금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패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보를 위한 과제가 뚜렷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실패한 요인은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데 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일상을 향한 사회·정치적 변화’에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런데 현 집권 세력에 대항하여 정권심판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120시간 노동에, 노조를 규제하겠다는 노동정책, 부동산 규제 푸는 정책 등 차별을 주류화하는 정책을 하나같이 주요 공약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심판받은 세력과, 정치적인 기대를 갖고 권력을 몰아줬지만 실망하게 만든 세력이 정치의 이유는 뒷전으로 한 채 권력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고 있다. 기만적인 반동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일삼는 정치 세력에 ‘성평등’을 믿고 기대할 수 현실에서 다시금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이 시대적 과제임을 각인 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 군통수권자가 군의 오래된 군사법원 문제와 군 조직문화의 가부장성과 폐쇄성을 해

결하고 죽음의 구조를 끊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절의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드물게 가고 그 사이를 메워야 하는 돌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여성은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문제에 있어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가 ….

문재인 정부 4년, 성평등 공약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성평등·젠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 마련부터 최종 평가까지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기구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현재 비서관의 지위와 권한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주류화를 위해 대통령과 여성가족비서관, 여가부 장관을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형)’ 구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sup>2)</sup>

시대는 다양성과 평등을 원하고, 2021년 필요한 정치의 비전은 ‘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치권이 ‘페미니즘 타하기’가 아니라 ‘이루지 못한 평등의 과제’에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성평등’이 공동의 시대적 과제를 각인 시키는데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의 힘이 모여야 한다.

---

2) [문재인 정부 4년] 젠더폭력 대응 적극적, 성평등 실현은 뒷걸음 (여성신문, 2021.04.29.)

**발제 | 페미니스트, 교차하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황연주)**

## 1.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의 ‘평등’

### (1) 2017년 성평등개헌 운동 과정에서 마주한 백래시

2017년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진영이 성평등 개헌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 마주한 백래시를 먼저 이야기하려 한다. 이 부분은 2017년-18년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성평등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분석과 대안모색”의 일부(미디어 보도 분석, p.12~56)를 발췌했다. 2017년의 백래시의 양상과 함께 현재의 백래시의 유사한 점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평등 개헌 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이 등장하고 이 프레임은 성평등 개헌 반대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프레임이 등장한 2017년 주요 사건을 통해 성평등 개헌에 대한 역습과 반발을 단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조직화된 사건으로 정치적 맥락에 위치시킨다.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 언론에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이 등장하고 조직적인 정치적 공세로 나타난 현상을 시간 순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다.)

#### ① 2017년 1월~4월, 대통령 후보자 자질 검증: 차별금지법(동성애)과 안보

5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즉 차별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다루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동성애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태도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연결함으로써 대선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의 문제를 종교적 해석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 ② 2017년 5월~7월, 군형법 92조의 6와 국가인권위원회

이 시기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군형법 92조의 6 유죄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발표, 퀴어문화축제 개최, 그리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이슈들로 더 확산되었다. 군형법 92조 6은 앞서 본 동성애와 안보정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 활용된다.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보수 기독교 단체와 언론은 군대 내 계급위계에 따른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남성 군인에 의한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보수 단체와 언론은 ‘양성’평등을 말하면서도 이성 간 성폭력이 야기하는 군 전력 약화에는 침묵한다. 결국, 이들에게 동성애는 안보를 말할 수 있는 좋은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315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시민단체 연



합'의 기자회견이 보도되었고, 이는 본격적인 성평등 개헌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의 시작을 예고했다. 보수 개신교는 성평등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말인 반면, 양성평등은 동성애 비판을 수용하는 언어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작의적으로 대립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 ③ 2017년 7월~9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개헌은 현행 헌법 36조에 나와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개헌은 현행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 및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인정하게끔 해석의 여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성평등 개헌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데 이때의 성평등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외의 성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들, 즉 성불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평등’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즉 전통적 이성애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가정 내의 폭력 및 차별들, 가부장제 하에서의 성역할로 인한 지속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등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가족의 수가 급감하며 따라서 그러한 이상적인 가족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즉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제도의 왜곡 등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말끔하게 지워버린 채 “성평등=동성애” 공식을 만들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 ④ 2017년 9월, 인사청문회와 동성애 반대

8월에는 동성애 항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10만 명의 서명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후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개입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동성애”가 가장 중요한 검증의 잣대가 되었다.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차별금지법제정 찬반 여부를 묻던 것과 유사하게 작동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개신교가 조직화된 힘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는 김이수 헌재소장을 부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이러한 정치적 세력화의 효과는 기독교의 정체성은 동성애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9월 하반기는 교단에서 동성애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했던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개신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고, 교회의 힘을 입어 “동성애 합법화하는 성평등 개헌 반대” 관련 기사들이 계속 이어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예수장로회(예장) 등 개신교 총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쏟아냈다.

### ⑤ 2017년 11월-12월,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반대

11월부터는 양성평등/성평등 대립 구조가 행정부로 옮겨간다. 8-9월에는 개헌에서 성평등 조

항 신설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었다면, 11월 16일 여성가족부의‘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공청회에 일부 참석자들이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여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성평등 개헌반대 운동을 펼쳤던 진영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폐지하고 여가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수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 혐오를 이용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페미니즘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보수 개신교가 개헌 논의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든가 혼인과 가족 관계에서 양성을 삭제하지 말자는, 즉 동성애를 옹호할만한 조항에 대한 반대를 펼쳤다면, 여성가족부를 향한 규탄은 성평등 정책에 있다. ‘남아빠진 페미니즘이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권익만 주장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여성이 현실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에는 관심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YES라고 외치는 양성평등에도 여성은 없다.

2017년 개헌 논의 당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는 “성평등 개헌 반대.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균형법96조의 2 폐지반대.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폐기”주장이 도배되었다. 이들이 성평등개헌 반대운동을 펼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성애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동성애 반대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부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하고 난민을 반대하고 트랜스젠더를 반대하기까지 반대하는 영역이 확장되어 갔다.

보수 개신교계에서 외치는 “양성평등 YES”에는 성별 이분법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성역할로 인한 억압과 차별 이야기는 없으며, 성불평등에 대한 언급과 분석도 없다.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는 유지하여 기득권을 굳건히 챙기려는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이들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양성평등 YES”를 외칠 때 ‘평등’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 외치는 평등에 평등은 없었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 안에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려해도 보수 기독교의 양성평등은 이미 동성애 반대라는 의미를 획득한 만큼, 양성평등은 이미 차별적인 언어가 되어 무심결 사용하는 양성평등 용어 사용자나 양성평등을 다른 맥락에서 주장하는 것마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인 양 왜곡되어 전달되게 되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그동안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이 작용한 결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의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 결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과 민원을 던지고, 개헌 특위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자리에서 피켓팅을 하며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며 이후 정부 및 입법기관에서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았다. 2017년 성평등 개헌 논의 당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치던 이들은 다른 얼굴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반대하기 위해 2017년 당시의 조직적인 공세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더 많은 입법과 정책은 이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아야하며 퇴보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2021년에 마주하고 있는 백래시, ‘성평화’와 ‘진정한 평등’

2017년 성평등 개헌 논의 과정에서 보수 개신교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세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이후 성소수자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하고 지역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인권에 반하는 활동들이 이어져 왔다. 반면 그 사이에 미투 운동, 불법촬영 반대 시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문제 등 여성/페미니스트 운동은 차별과 폭력을 끝내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2021년은 그간 페미니스트 운동에 역행하듯 안티 페미니즘에 올라탄 정치인들이 ‘과도한 페미니즘 정책’과 ‘젠더갈등’을 입에 올리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평등 없는 양성평등을 외치던 보수 혐오 세력이 정부와 입법 기관을 흔들며 놓았던 것처럼 지금의 안티 페미니즘 진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 성평화연대 등 ‘평등’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젠더갈등’이 있는 사회가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은 하지 않는다. 한축으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치는 동안 여성들과 여성운동이 만들어온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 정책을 훼손시키며 평등 없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단체 두 곳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살펴보겠다.

### ①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성평화연대는 가정의 소중함과 남성과 여성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능력의 보장을 받고 모든 영역에서 서로 자유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장받음으로써 실질적 성평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것(동성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파괴와 해체만이 따를 뿐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성파괴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존중받아야, 진정한 성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성파괴/성해체적 이데올로기와 행동과 운동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구성하는 사회에서 온전히 성취향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9일, 한국성평화연대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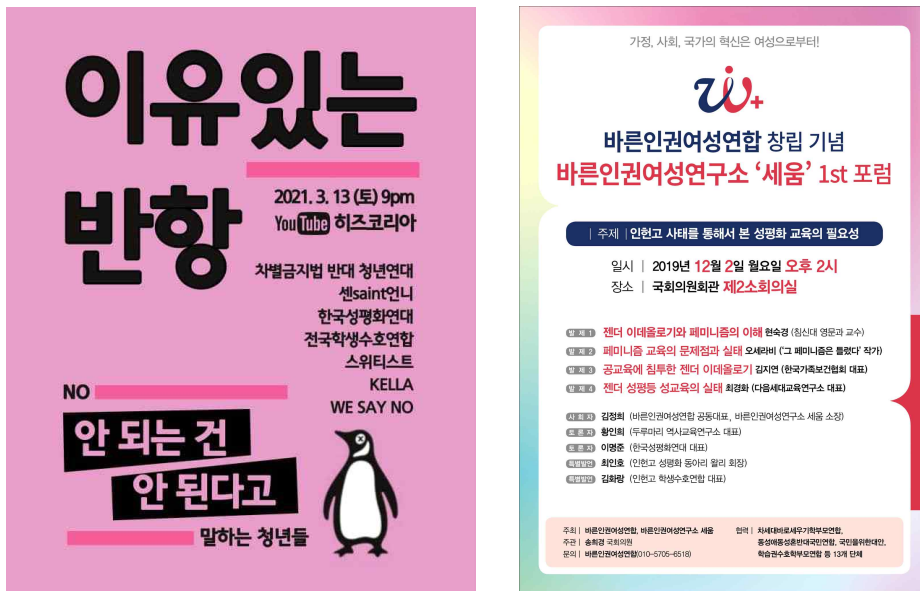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교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스킨십 등에 대해서 전부 개입하여 이것을 공공의 영역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남녀를 재판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탈코르셋 운동과 탈브라자 운동 그리고 데이트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미투운동, 비동의간음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그루밍성폭력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언뜻 보면 여성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을 국가로 종속시켜서 여성팔이장사를 하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세대들을 결집하고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반페미”다. 하지만 반페미에서 그치기에 이미 인류의 깊숙한 곳까지 지배당한 상황이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옳은 가치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성평화’가 필연적이다.” (2019년 11월 26일, 한국성평화연대 페이스북)

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가족을 강조하는 것이 2017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친 곳의 주장과 흡사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성파괴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동성애가 가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고 외치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현존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여성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차

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앞서 나열한 탈코르셋 운동부터 미투운동까지 이 운동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이 싫어서 성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평등 없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스스로 모순을 느꼈던 것인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평등’의 개념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한국성평화연대가 어디와 결합하여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자면,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 진영과 함께 하고 있다.



## ② (주)신남성연대

(주)신남성연대라고 지칭한 것은 이들이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들은 남성‘연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시위를 개최하고, 언론 대응 활동(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을 하며 운동 단체의 외양을 베끼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혐오를 수단으로 삼는 집단이다. 한국성평화연대가 2017년 성평등개헌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백래시 세력과 비슷하게 그들만의 담론과 전략을 만들었다면, (주)신남성연대는 페미니즘을 공격하며 저급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주)신남성연대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페미니스트들에게 점령당했던 아스팔트를 되찾아 진정한 평등 추구
- 남성인권 신장이라는 대의적인 목표보다 내 아이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받게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사의 마음으로 활동
- 거두절미 가족을 위한 투쟁은 자연스레 남성인권 신장으로 귀결과 동시에 반페미활동

(주)신남성연대의 목표에는 어떤 평등을 이루겠다는 것이 없다. 페미니스트들이 아스팔트를 점령한 적이 있었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맘껏 누리며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일’ 시위 참여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추구인 것일까? 남성인권 신장이라는 대의적 목표보다 아이를 페미니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왜 우선일까?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왜 노키즈존이나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가족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자연스레 남성인권 시장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남성 가부장의 권력을 보장하는 단위로서의 정상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가족을 위한 투쟁이 반페미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은 보수 개신교 혐오세력이 이야기한 ‘가족을 해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남성연대는 남,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하는데 그 이의를 담고 있습니다. 허나 카페회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무작정적으로 여성혐오자들이 유입된거 같은데 이거 본 카페 운영진들은 분탕새끼들로 간주하고 가차없이 탈퇴시키세요. 어렵습니까? 남,녀가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는것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찢어야 할 대상은 꼴페미들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카페 글)

“여성혐오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남성혐오에 반대하는 즉, 페미니스트에게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 전체를 '여성혐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페미니즘은 표가 되지 않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저들에게 더이상 휘둘러선 안됩니다. 올바른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어머니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올바른 남성,여성들을 남혐주의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2021년 8월 22일, 신남성연대 홈페이지 [떼법은 떼법으로 맞서죠 뭐] - 신남성연대 문자총공 글)

한국성평화연대나 (주)신남성연대는 남성과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올바른’과 ‘건강한’을 외치고 있다. 차별의 구조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구조의 해체와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을 ‘나쁜’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바른/건강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는 2017년 이후 만들어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치던 단체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동시에 ‘반페미’를 외치고 있다. 페미니즘=남성혐오로 등치시키는 몰이해와 혐오놀이가 만나 ‘꼴페미’를 척결시키겠다는 (주)신남성연대의 활동은 결국 남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도, 평등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남는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맞서 우리의 운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야기할 때 이 두 단체의 특성 상 차이가 생긴다. 성평화연대와 같은 보수 혐오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차적 연대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주)신남성연대와 같은 후지고 악질적인 혐오세력의 경우 이들의 돈벌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페미니스트, 교차하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

여성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연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시민/여성운동이 사용해온 표현들을 차용하는데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에 연대라는 이름을 저들이 사용하며 훼손시키더라도 여성운동의 연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페미니즘 또는 여성정책 단일한 영역에서만 백래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학력/노동자/성소수자/외국인/난민 등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양성평등 YES”를 외치던 곳에서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여성운동이 다른 소수자 운동들과 만들어진, 지켜내온 가치들은 페미니즘 단일 속성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교차적 연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 (1) 교차적 연대 Intersectional Solidarity<sup>3)</sup>

이 장에서는 교차적 연대의 개념과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분석과 함께 왜 교차적 연대전략이 필요한지 서술하고자 한다.

#### ① 연대와 연합 Solidarity and Coalition

페미니즘은 다양한 차이와 경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여러 운동과 연대해왔다. 페미니즘 운동에서 연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연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연대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회정치학 분야 내에서도 연대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나 Tormos (2017)는 연대를 힘의 불균형을 협상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넘어 결속과 연합을 만드는 정치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공동행동, 제정연대, 네트워크, 연합, ~사람들 등 다양한 이름과 유형의 연대 내에도 단체/조직 사이에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힘은 역사, 회원 수, 재정(후원금) 규모, 활동가 수, 대외적 대표성 등 다양한 자원을 칭한다.

연합은 두 개 이상의 사회운동 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칭한다. 넓은 범위의 이슈에서 느슨하게 결합하는 것부터 활동가 간 협동하는 우산조직을 설립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연합의 맥락에서 이슈와 목표의 프레임은 특히 어렵다. 단체는 회원들의 지지를 확실히 하고 협력을 위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 구성원이 가진 프레임들을 맞춰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슈를 프레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불완전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단체가 들어올수록 더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맥락에서 더 많은 회원, 역량, 자원을 가진 힘 있는 단체는 연합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 ② 교차성 Intersectionality

특히 정치적 교차성(political intersectionality)은 두 상관된 이슈를 가리킨다. 첫 번째는 비특권 집단이 단체들 내에서 대표되고 목소리가 주어져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구분을 넘은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이슈인 비특권 집단, 소수자 집단이 대표되는 것에서 교차성은 전략으로 정의되고, 소수 집단을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힘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운동이 오랫동안 사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슈인 사회적 구분을 넘는 것이 교차적 연대로 정의될 수 있다.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인종, 계급 등으로 나타나는 다른 유권자를 조직하는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일어나는 협력의 사례들로 구성된다. 정치적 교차성을

3) 이 장의 대부분은 아래 연구를 요약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인용과 재인용 표시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Ciccia, R. and Roggeband, C. (2021) Unpacking intersectional solidarity: dimensions of power in coali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s and Gender*, vol 4, no 2, 181-198

바라보는 이 두 개의 형태는 서로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단체 내부에서 단체 간 연합으로 교차적 실천이 이뤄질 수도 있다.

### ③ 교차적 연대

교차적 연대는 다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사를 본질적으로 통합하고, 고유한 특권과 편견들에 질문을 던지며, 다른 이름하에 일어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투쟁으로서 인정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급진적 형태이다. 연대는 차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대와 엄격한 비평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을 포함하고 다루는 약속/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페미니스트 교차적 연대가 직면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단체들간 힘의 불균형 존재이다.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은 비서구권 학자뿐만 아니라 흑인과 치카나(멕시코계 미국여성)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강조되어왔다. 2021년 6월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한 '백래시 대응 연대체 준비 토론회'에서 플로어 토론을 통해 확인한 것,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만들며 지부와 회원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 중 공통된 것은 서울과 지역의 정보와 운동 조직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만들어어나가는 연대가 이 장에서 설명할 교차적 연대 개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페미니즘과 연대의 정의(definition)를 둘러싼 모순과 모호성의 존재다.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연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 내리지 않은 채 '페미니스트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운동의 독특한 특성은 젠더권력관계를 바꾸는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페미니스트 운동을 좁게 정의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정의를 위한 투쟁과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목표의 맥락을 가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교차적 연대 연구는 넓은 정의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채택하고 젠더이슈와 분명하게 교차하는 요소가 있다면 더 많은 이슈에 대응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김자연 성우 사건이나 게임업계 노동자 해고 사례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검증 문제이므로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단체와 함께 할 때 교차적 연대에 해당된다.

### ④ 교차적 연대 유형 분류

앞서 연대, 교차성, 교차적 연대의 논의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교차적 연대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분류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유형 분류에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목표와 이슈가 프레임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데,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와 차이인지(recognition of differences) 프레임이다.

공통분모는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경험과 이익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연합 내 다른 그룹 모두에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트랜스내셔널 운동에서 인권 담론을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보편적 이슈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공통 이슈가 아닌 특정 유형의 폭력을 가릴 수도 있다.

차이인지는 단체들 사이에 차이를 최소화하기 보다는 결합을 강조한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대가 형성되지 않고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이슈의 성격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한다. 차이인지 프레임은 차이를 넘은 대화의 산물로 단체들이 편견과 사각지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다른 단체들의 핵심 관심사와 언어를 점차 채택하게 된다. 2004년 March for Women's Lives에서 유색인종 여성단체 참여가 재생산 권리에서 재생산 정의로 연합 프레임을 바꾼 것처럼 차이인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개념의 확장이나 특정요소를 더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일어난다.

교차적 연대의 유형분류에 두 번째 차원은 전환적 실천(transformative praxis)이다. 가까이 있는 특정 이슈 너머 억압적 관계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오래 가는) 참여를 필요로 하며, 연합 내 권력 비대칭의 모든 유형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차원(이슈 프레임 방법과 전환적 실천)에 따라 교차적 페미니스트 연대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교차적 페미니스트 연대 유형 분류

전환적 실천 (transformative praxis)	이슈 프레임 방법(framing of issue)	
	차이 인지	공통분모
부재	1. 도구적 교차 (instrumental intersectionality) 단기간 단일 이슈	3. 결합 (incorporation) 단기간 단일 이슈
존재	2. 전환적 연대 (transformative solidarity) 장기간 복합 이슈	4. 실용적 연대 (pragmatic solidarity) 단기간 복합 이슈

유형 1. 도구적 교차 - 2004년 March for Women's Lives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유색인종 여성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네트워크 Sister Song이 기존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네 단체와 연합한 사례이다. 재생산 권리에서 재생산 정의로 전환하며 큰 성공을 거둔 행사였지만 연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유형 2. 전환적 연대 - 재생산 권리와 LGBTQ 운동

협력 잠재성을 논의하는 회의와 컨퍼런스를 수년간 진행하며 연합을 구성했다. 이 작업의 대부분은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뤄졌고 결국엔 70개 이상의 단체가 서명한 공동의 약속문을 통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운동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 재생산 정의 프레임워크는 성적 정의와 권리와 젠더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유형 1과 유형 2는 적대적 정치적 환경과 다양성 부족 비판이 있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하지만 두 연합의 지속성에 있어 차이를 만든 것은 신뢰였다. Sister Song의 경우 시간과 범위가 제약되어 있었으며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간의 합의가 부재했다. LGBTQ 운동의 경우 이슈와 투쟁 관련성을 분명히 하는 공통의 언어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장기간동안 이



뤼졌다.

### 유형 3. 결합 - 2011 네덜란드 이주민 가사노동자 노동권

미등록 이주민 가사노동자들은 2006년 가장 큰 규모의 민간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합은 배타적 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가사노동자들을 대신해 여성단체와 사용자 조직들을 로비했다. 2011년 ILO 조약 189에 따른 가사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등의 캠페인 활력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캠페인은 법 개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무역 조합이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 권리에 가사 노동자를 포함시키면서 이주 노동자의 특정 필요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합 리더는 만연한 반 이민자 정서 때문에 취한 전략이라고 정당화했다.

### 유형 4. 실용적 연대 - 이주 가사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네트워크

트랜스내셔널 운동은 종종 실용적 연대를 통해 이뤄진다. 권력, 문화, 전략적 이해, 단체 유형 등 커다란 불균형을 협상해야 하는 필요는 넓은 생각들 하에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RESPECT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는 인신매매(현대판 노예) 프레임에서 여성과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이 프레임은 네트워크가 만들고자 했던 정체성과 더 긴밀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페미니스트 EU 관료들과 무역 조합에 전략적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교차적 연대를 유형화하는 개념들이 가지는 이점은 교차적 연대 분석에서 힘의 담론적·물질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성을 가시화하고, 서로 다른 전환적 잠재성을 가진 네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하며, 전환적 연대라는 이상적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전환적 연대라는 진일보한 형태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연대에서는 이슈 프레임 방법,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 속의와 대표성 형태를 바꾸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략을 유형화하고 '이상적인' 전략 방법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연대 운동이 놓여져 있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형을 분류하고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운동을 비판하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연대의 유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 국면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미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운동 단체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체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환적 실천을 하자는 것은 차이를 인지하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운동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자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목표인 만큼 오랜 시간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교차적 연대 중에 앞으로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가 채택하고 실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최선인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범페미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연대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이 백래시의 흐름이 단순히 페미니즘/여성 인권에 대한 백래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백

래시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바라보고 정책적 논의를 던질지 또는 그 이후 계속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며 나갈 것인지는 많은 이들의 지혜와 토론을 필요로 한다.

### 3. 나가며

우리의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가 걸어온 대로 나아가면 되겠지만 지금의 백래시 상황에서 이 전략만 논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신남성연대의 폭력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있는 운영지침 마련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거대한 역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의 행태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치권이 (그 이전의 흐름들은 차치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수용하고, 미투운동이 활발했음에도 정치권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4.7 재보궐선거 때 20대 남성의 투표에만 주목한 것에 편승하는 등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과제에서 미적거리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앞서 2017년 백래시 상황에서 성평등 개헌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 을 가지고 정책과 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상기한다면, 최근의 ‘손가락 모양’ 민원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젠더갈등’ 프레임이 지금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치인들 입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오르락 내리며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페미니스트들이 점령한” 아스팔트 거리를 점령할 수도 없게 되었고, 지역 간의 이동과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이 백래시의 흐름에 맞선 우리의 세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있다. 그럼에도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운동과 현장을 모아내 이 ‘반격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기를, 차별과 혐오에 당당히 맞서 평등을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토론 | 대학가 백래시, 혐오의 합리화 (여자대학교페미니스트네트워크 W.F.N. 활동가 권예원)

2030 여성으로 상징되는 영영페미니스트의 시작은 2016년 여름에서부터였다.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사회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정신이상자의 전형적인 무차별 범행”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데에만 힘을 썼다.

사회는 여성혐오를 지우고, 무시하고, 방치했다. 그러나 이 오래된 혐오에 여성은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거대한 불꽃처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18년은 영영페미니스트 활동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미투운동은 이전의 불꽃들을 지지기반으로 단단하게 고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의 답변은 백래시였다. 펜스룰처럼 문제의 원인을 가부장제 기득권이 아닌 여성의 존재로 돌려버렸다. 2018년이 페미니즘의 분수령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주장들을 이른바 “합리적 의심”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며 전혀 합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페미니즘을 향한 공격들이 이어졌고, 남초커뮤니티의 유구한 백래시는 이미 거대한 불길이 되어버린 여성주의에 가시적인 대항마로 여겨지며 이들의 혐오가 일종의 주류 놀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부정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엘리트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론의 장이었던 대학은 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의 늪에 빠져버렸다. 단단한 연대에서 개인으로 학생들의 파편화는 시작되었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각광받는 것이 지금 대학가의 현실이다. 능력주의적 경향은 각자도생을 대학가의 진리로 환원시켰고 소수자의 인권과 연대의 의미는 사라지고 차별시정정책은 비합리적인 특권이자 자신을 위협하는 역차별로 오도되고 있다

- 약 9년 만에 궤위상태이던 총여학생회의 선거운동을 재개하자 학생총투표를 통하여 총여회원들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총여가 폐지된 사건
-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총학생회칙 등을 개정함으로써 학생총투표 발의 기준을 완화하여 총여학생회를 폐지한 사건,
- 성평등위원회의 성폭력 및 성차별 피해자 연대체 활동을 ‘남성 차별’이라며 탄압하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성평위의 선거질 의서 사업을 해당 대학 선거세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위원장을 파면시킨 사건
- 여성혐오를 반대하고 연대의사를 표시한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학생사회와 학생대표자의 ‘남성 혐오’ 주장을 바탕으로 왜곡 해석하고 운영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권위원장이 사퇴하고 인권위의 활동을 위축시킨 사건.

그 외에도 대학가에서 진행되는 여성혐오는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존재로 환원시키려는 소위 ‘남성 혐오’ 주장을 방패로 학내 여성주의를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다.

### 1) 선출직 대표자의 비합리적 권한 행사: 독립성 없는 독립기구, 인권위

추첨과 선발을 통해 구성되는 인권 자치단체와 달리 총여학생회를 포함한 총학생회는 선출직이

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의장인 총학생회장과 함께 각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에 근거하여 산하 자치단체 활동을 인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인권위 활동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는 활동을 결정할 권한이 아닌 인준할 권한을 가짐에도 해당 권한을 시혜적인 허락인양 해석하며 학생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대표자 등이 자치권을 침해할 근거 세칙 조항이 부재함에도 자치 단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할 때에도, 근거 조항 제시 및 해석 오류를 지적하더라도 해석 권한이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 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다.

특히 소수자성을 중요시하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다수의 투표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이 다수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의 합리적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머릿수 싸움으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권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명백히 다수주의에 근거한 소수자 탄압을 정당화한다.

## 2) 학내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자의적 해석 : 권력자 눈치보는 학생자치사회

학내 인권 자치단체가 학생 사회에 분란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해당 단체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분란의 원인은 기존의 가부장제에 있지, 새로운 페미니즘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분란의 발생은 공동체 담론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해당 공동체의 담론이 혐오로 점철되어 있을 때, 공동체는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위를 분란이 시작되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위의 사례에서 학우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지적한 인권위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학생 회칙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학내 공론장이 혐오로 뒤덮여 있으며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힘써야 할 학생 대표자들이 오히려 혐오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 3) 합의과정의 불합리 : 발언의 비대칭성

학생자치에서 의결권의 순위는 전체 학생이 직접 논의하고 의결하는 학생총회, 투표로 결정하는 학생총투표, 학내 선출 대표자들(총학생회장단, 각 대학 학생회장, 학과 대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들 중 대학 학생회장 이상만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대부분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위원들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단체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마저 일방적으로 통보당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발언하기 쉽지 않다. 특히 단 대표자 의원들의 질의사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 번에 여러 대의원이 질문하는 경우 단 한 명의 참석자인 단체장이 답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홀로 답변을 하는 단체장과 달리 질문을 하는 대의원은 여럿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각 한 번씩만 질의한다 해도 사실상 논의 지분을 모두 차지하게 되며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하는 경우도 많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도 합의 과정에서 대의원과 인권위 간의 발언의 무게가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 4)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운영 문제 : 대학 내 신자유주의가 학생자치를 재판기로 본다.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회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의 특성상, 주로 “모두가 내는 학생회비를 일부를 위해 사용한다.”는 논리로 공격받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사업은 특정 소수자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해 발생 시 상담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이상, 사업은 소수자성을 갖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받는 회비는 대개 외부 인사 초청 강의 등 공동체 전원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회비가 사실상 간식사업에 국한된 복지사업 비로 전락한 현 상황에 공동체 담론을 주도할 기능을 상실한 이후, 학생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모든 학생자치단체에게 자판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 5) 진행 과정에서의 (사이버)불링

고질적인 문제이며 활동 의지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인권위 위원들의 개인정보가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되어 온라인 상의 모욕 또는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 지속적인 메일 발송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이버 불링 사례이다.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물리적 공격 역시 존재하는데 총여학생회실처럼 단체 공간이 있는 경우 문을 발로 차고 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예방해야 할 학생대표들은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 또는 방관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6) 혐오의 맥락 지우기 : BLM(Black Lives Matter)에 ALM(All Lives Matter)

상기의 백래시가 가능한 이유는 권력자가 스스로를 약자화 하는 것, 즉 혐오의 사회·문화·역사·권력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혐오의 역사와 맥락, 그리고 현황에 대한 무관심이 기득권 중심의 '모두'를 상정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소수자 혐오를 비가시화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학가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백래시의 기본 구조인데 BLM(Black Lives Matter)에 ALM(All Lives Matter)를 주장하는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혐오에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사람을 성차별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 혐오의 기제는 모두 이분법에 따른 정상성 부여와 우열화에 따른 결과로써 서로 다르지 않고 거의 같은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탄압을 정당화 한다. 그러나 백래시로 인해 지워진 거대한 맥락은 소수자 정치를 고통의 전시로 환원시키고 소수자들은 파편화 되어 연대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여자대학 내부에서 다른 소수자 이슈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의 대학가는 더이상 진리탐구와 사회변혁의 장이 아니다. 대학은 직업양성소로 전락하였고 파편화된 학생사회는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잃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변혁을 주장하는 동료 학생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누구도 변화를 바라지도, 변화를 위해 행동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백래시는 지금의 대학가 상황을 민주적으로 결정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포장한다. 대학 내 백래시는 그러한 민주성과 합리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합리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단순히 머릿수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인권위가 선출직이 아닌 이유는 다수자의 논리에 따라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총여학생회도 권력적·역사적 소수자인 여학생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즉 인권위 활동의 정당성은 소수자성에 있으며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자의 편의를 위해 다수자가 허락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민주적 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은 숫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적 소수인, 그리고 정치적 소수인 약자의 의견은 언제나 다수에 의해

진전의 기회를 잃는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논의의 장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절차 준수만이 아닌 그 절차가 처음부터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2018년 겨울에 진행된 포럼의 제목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

# 대학가 백래시, 혐오의 합리화

여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F.N  
권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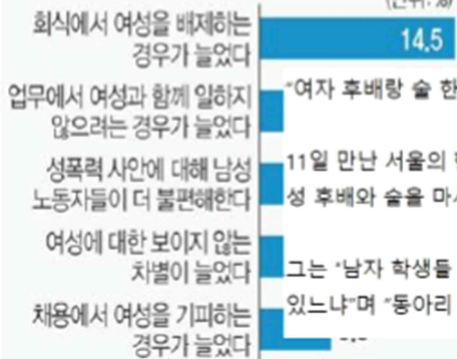


## | 영영 페미니스트

‘영영페미의 탄생...’강남역 10번출구, 우리 삶을 바꿨다



### 미투운동 이후 직장 내 부작용 \*중복응답 가능 (단위:%)



\*실문조사 대상은 민주노총 조합원 409명 (자료: 민주노총)

### 뉴페미 운동, 강남역 살인 사건 ‘#난 운동계 살아남았다’가 전환점

2015년 7월 1일 | 2015년 7월 10일 | 2015년 7월 10일

#### 여성과의 이야기

누군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영영페미니스트’라 부른다. 그간가 하면 1990년대 PC통신 세대 때 활동했던 ‘영영페미’보다 더 어린 세대로 ‘영영페미’, 영호산의 페미니스트라며 ‘영영페미’라고도 이름 붙여진다. 2015년 겨울였다 해체된 ‘해결리아’ 사이트의 이름을 딴 ‘해결시대’라는 호칭도 있다.

#### 사회

##### 1. 영영페미

##### 2. 영영페미

##### 3. 영영페미

##### 4. 영영페미

“여자 후배랑 술 한잔 하기가 겁나네요.”

11일 만난 서울의 한 대학에 대학중인 박모(23)씨는 “2018년 한해 미투 운동이 불며 대학에서도 여성 후배와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괜히 여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 필요가 굳이 있느냐’며 “동아리 활동이나 과제에서도 남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세계일보

백래시의 등장, 대학가 여성혐오 분위기 조성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단단한 연대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이기주의로의 변화**

**대학가  
백래시**

중영일보 IMF구제금융 요청

financial crisis Great Crash of 2008

자료출처 : 서울신문

**캠퍼스 내 성차별 경험**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단위: %)

대학생	71.8
남학생	58.8

성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단위: %)

학교	41.5
이론비이론 직장	28.3
집	14.8

대문 지역 5개 대학 5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백래시

여성혐오에 영향을 받은 인권단체

대학교 총학생회  
폐지 및 후속기구 신설에  
대한 학생총투표 서명

12/24 출간

외중에 경영관앞에 총여잔존세력팀대  
존니여대기

대학교 총학생회

12/24 출간

외중에 경영관앞에 총여잔존세력팀대  
존니여대기



## 선출직 대표자의 비합리적 권한 행사:

독립성 없는 독립기구,  
인권위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



## 학내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자의적 해석:

권력자 눈치 보는 학생자치사회

- 4월 2일 타 단체의 연대 요청
- 4월 8일 인권위원회의 타 단체 연대 성명서 공유
- 4월 9일 예브리타임 발 해당 활동 비판 확산 및 인권위 위원에 대한 사이버불링
- 4월 10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출석 요구 및 경위 파악
- 4월 11일 인권위원회 징계 조치 및 사과문 게시, 위원장 해임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
- 4월 1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 인권위 징계 의결

1. 인권위 설립목적과 기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진행한 점.
2.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당시 인권위 인준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시킨 점.
3. 00대학교 총학생회 특별기구로서 인권위원회는 00대학교 **학우들의 화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경쟁과 소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외부단체와 연대를 진행한 점.
4. 인권위원장이자 위 의 사항을 좌시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학내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자의적 해석:  
권력자 눈치 보는 학생자치사회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학생 사회에 분란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해당 단체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 합의과정의 불합리:

### 발언의 비대칭성

#### 2장 학생총회

7조 (지위) 학생총회는 동덕대학교 새동캠퍼스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3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미소집 및 불여 정족수 도달 시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 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24조 (지위) 중앙확대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중앙확대운영기구이다.

#### 6장 중앙운영위원회

29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중앙상설 의사결정기구이다.

자료출처 : 홍대신문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 합의과정의 불합리: 발언의 비대칭성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운영 문제: 학생자치를 자판기로 보는 대학가 신자유주의



##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 진행 과정에서의 사이버 불링

### '자정기능' 없는 에타..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 대학생 죽음 내온 '에타' 악플...사이버 불링 피

2021.04.13. 13:36 | 2021.04.13. 13:36 | 댓글 0개

지난달 에타 악플 사달은 에타생 A씨 극단적 선택 25개 청년-연경단체 기자회견 ... "혐오 방지 할라" 익명성 따른 부차적 논란 불구, '에타' 측 '욕망무달' '악명 개서면, 사이버불링의 장 .. 연-대학 책임져야'

24 2021-04-13 13:36 | 1-8 2021-04-13 13:36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타' 악플에 극단 선택... 장난감에 "가담대학, 악성 댓글 무책임 방지" 이수정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지레차 구매대행이 아닌



정년할때까지 20개 정년 인정인제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대학에 관한 뉴스입니다. 에브리타임과 대학에 악성 댓글 관련 책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김영우

## | 대학 내 백래시의 특성

# 혐오의 맥락 지우기: BLM(Black Lives Matter)에 ALM(All Lives Matter)



출처 : unsplash, Black Lives Matter protest

Macy [redacted] 7:13 AM  
To: Jeffrey P. Skozos >

**All Lives Matter**  
Found in Amazon Email inbox

It is quite disturbing to get on the AMAZON website and see "BLACK LIVES MATTER."

You provide services to more than millions of people, including my self and the rest of my family for our business needs and personal purchases. I am for everyone voicing their opinions and standing up for what you believe in, but for your company to blast this on your website is very offensive to me and I'm sure you'll be hearing from others. **ALL LIVES MATTER!**

And if it wasn't for all these lives providing their service to your and your company,

출처 : 조선일보 기사

| 대학가 백래시, 혐오의 합리화

**2018 총여 백래시  
연말정산**

12월 14일 14시 김희  
혜화 대학교공헌원 빌

0장 기간 2018. 12. 14. 백래시  
0차지 않고 지지한다  
02018 총여 백래시

대학 내 백래시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

김희혜  
최정민

## 토론 |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아)

### 1. 백래시

-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1991년에 쓴 동명의 책에서 처음 쓰였다. 팔루디는 1980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 배경 속에서 행해진 페미니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백래시로 명명했다.”<sup>4)</sup>
- 미투운동이 고발하고 균열내고자한 기득권은 무엇인가?

### 2. 성별화되어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 연대, 참여

-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미투 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도가 80% 내외로 높았다. 남성은 4~50대가 70% 내외로 높고, 2~30대는 50% 내외로 낮았다. 20대 남성의 지지 비율은 47.2%였다.
-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3월 20대 남자 중 77%, 여성의 84%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는 20대 남자 중 29%, 여성의 74%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 이슈가 있을때마다 응원의 후원도 증가, 한편으로 감경을 목적으로 후원하는 남성들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 > 2020년 텔레그램N번방이 이슈였던 3월~6월 세달 사이 적발된 가해자/가해추정인은 신규 후원자의 10.28% (감형 목적 후원한 가해자 주변인 포함)
- > 2021년 7월 중순 경, 가해자 커뮤니티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후기 올라왔다. 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어렵다고 하자 후원중단 의사 밝힌 회원은 4명.

### 3. 백래시, 누구를 향하는가?

#### ▶ 문제제기 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공격

-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역고소,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보복성’ 시도
- : 박진성 시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고은 시인의 피해자 및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기덕 감독 피해자 지원 단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피해 배우 등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
- : 2018년 5월 25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 동의 청원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4만여명 동의)

4) 한국일보 허스토리(2021.05.20.)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herstory/Read/220>

## 청원내용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선출직 정치인에 의한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가해자 주변인 혹은 지지자에 의한 공격

피해자 실명 유포 및 악성 댓글, 피해자의 사진 영상 필적 등을 통한 꽃뱀 이미지화 및 비난,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가짜뉴스,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 이라며 피해 부정, 피해자 변호인, 지원단체, 활동가 등 조력인에 대한 공격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주의,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평판을 드러내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의심, 여성혐오,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과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펜스룰,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신뢰하고 공감하는 현상에서 기인했다. 이는 사회적 위치를 가진 스피커들을 통해, 인터넷과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 되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를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조장했다. 피해자가 고발한 기득권은 무엇인가? 성별화되어있는 정치권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권력이다. 그러

나 정치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과 2차 피해가 이어졌고, 2차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 주변인들이 정치권에서 제재없이 수용되고, 정당에서는 보궐선거 국면과 그 이후의 평가에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이루어졌던 보궐선거는 '이대남 표심을 잡아야 한다'로 귀결되었다. 여성 시민들에게는 펜스롤이 쳐지고, 정치적 계승자로서는 20대 남성이 초대되는 상황은 아닌가?

▶ 여성 유명인을 향한 공격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05.04. 단호한시선

성평등을 위한 '성희롱 문제제기'인가,  
성평등을 막는 '백래시'인가?

: 연예인 박○씨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고발 사태에 부쳐

‘여성이 하면 농담, 남성이 하면 성희롱?’

- 성폭력 사안에서 여성은 왜 피해자이기만 하고, 남성은 왜 가해자이기만 하냐는 반발에 근거해서 나온 근거이다.<sup>5)</sup> ‘남성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어떤 불평등을 심화했는지, 어떤 권력 관계를 맥락으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다.
- 여성이 피해자이기만 하고 남성이 가해자이기만 하는 성별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은 페미니즘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성별화된 피해와 가해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주목한다. 드러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 ‘불편하면 성희롱?’이라는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기도 했다. 미투운동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된 ‘성인지감수성’, ‘성차별’, ‘성평등’, ‘피해자 관점’ 등의 페미니즘의 언어가 ‘왜 남성을 가해자 취급하는가, 남성도 차별의 피해자이다’ 라는 식의 반발을 통해 성별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유통될 수 있다.

▶ 온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 그룹 및 여성단체를 향한 공격

-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 그룹이 말하고 행동할 때 더 공격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 공격의 양상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 성적 괴롭힘, 스토킹과 유사하다. 남성인권을 말하는 운동세력이 아니라 성적 괴롭힘을 일삼는 가해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5) 한겨레 ”‘쌤, 페미죠?’ 교실도 헝싸인 백래시“(2021.05.17.) ”2018년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13~18살 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있는 인식 차이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다”는 문항에 여학생이 92%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은 60.5%에 그쳤다. ‘모든 남자를 성폭력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는 문항에는 남학생의 4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은 18.1%에 불과했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도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 하다’는 문항에는 남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5438.html>



### 3. 백래시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

- '백래시'라고 이름붙이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성평등과 여성/소수자인권에 대한 반발과 방해들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운동적 경험들을 되짚어 보며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
- 백래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하며 조치를 취하는 수사재판기관, 기업, 정치권, 언론, 공공기관, 학교 등 공적 기관에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활용하여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야 한다.(예\_집회참가자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
- 미투운동이 해체하고자 했던 기득권에서 백래시를 방관하고 조장하지 않도록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

## 토론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